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대북 제재의 전면적 해제와 남북 수교·북미 수교가 통일의 길이다

지금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에서 대결과 적대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혼돈과 갈등의 위기 상황이다. 통일문제를 전공한 학자로서 결론을 말하면,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열쇠는 대북 제재의 무조건적인 전면적 해제와 남북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북일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1970년 서독 진보적인 사회민주당 출신 브란트 수상은 교류협력 통일정책인 동방정책을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시켜서 1990년 보수적인 기독교민주당 출신 콜 수상이 독일 통일을 완성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과 시사(示唆)를 배워야 한다.

10년, 20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와 평화, 상생의 쌓이지 않고 느닷없이 하루 아침에 통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 붕괴론이나 흡수통일론은 가능하지도 않고 수천 조(兆)에 이르는 통일비용과 통일 후의 바용과 큰 사회 갈등을 생각하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6·25 참전 적성국가,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제주도로 불러서 한러(韓露) 수교(修交)를 할 때, 초(超)핵강대국 러시아에게 핵감축이나 비핵화를

요구한 적 없고, 상환조건도 명시하지 않은 3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면서 국교(國交)를 수립했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이 6·25 참전 적성국가, 북한의 혈맹, 중국 옹호라고 불렀던 중화인민공화국(중공)과 수교할 때도, 우 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중국의 엄정한 핵무기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한 적 없다. 지금 우리는 핵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에게 핵무기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면서 무슨 핵감축이나 비핵화(非核化)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경제력 군사력 등 국력이 북한의 50배이고, 인구는 두 배인 한국이 한미 동맹의 강력한 핵우산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1990년부터 남북 수교, 북미수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정상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지금까지 30여년 거부하고 있다.

대북 제재의 지속 강화, 고립 압박, 세계 유일의 분단과 고통의 고착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개발한 핵과 미사일만 먼저 포기하라는 선(先) 비핵화, 미국의 최신 전략무기 수입 세계 1위, 유엔제재에도 걸리지 않는 남도적인 지원까지도 막으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모든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상태의 현상 유지로 시간만 간다는 것은 북한에게는 내내의 한계, 임계점(臨界點 critical point)을 넘는 엄청난 고통과 분

노의 폭발 밖에 없다. 이관사판(理判事判)의 결단의 시점에 다다랐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하고 화해협력력을 바라기 때문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등을 하고, 10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순안공항에서부터 평양까지 도로에 나와서 환영했고, 9월 19일 대동강 놀라도에 있는 5·1경기장에서 15만 명 환영 군중집회를 개최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연설을 들으면서 열렬히 환영했다. 백두산 천지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 함께 등장하는 위대한 통일 역사를 창조했다. 기이(奇異)한(事變的)이고 혁명적이다.

현재의 남북관계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이 센 강자가 상대도 안 되는 약자의 목을 조르면서 괴롭히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비유가 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악마, 인간 백성, 인간 생지육 등이 담긴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이 아닌 긴장과 분열을 조성하는 도발이다. 자칫하면 군사적 충돌과 국지전(局地戰)으로도 번질 수도 있다. 효과면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고사하고, 대남 적대감을 부추기고 남북관계를 대결과 파탄으로 몰고가는 반

통일적·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이다.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는 모든 체 하고, 대북제재로 식량이나 비료 등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지원할 수도 없다. 한국은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자세로 결과적으로 묵인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면전(全面戰)이 아닌 국지전(局地戰) 정도는 이관사판으로 각오하고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말이나 화담, 선언으로는 북한은 더 이상 기다리거나 버티기 어려운 절박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화해협력의 햇볕정책 10년의 성과를 보수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강경 대북정책으로 모두 무효화시키고 통일의 길에서 역주행(逆走行)하자, 북한은 이명박 정권에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으로 경고하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폭격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냈다.

대북 대결 적대정책을 계승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붕괴론을 믿고 2016년 남북 경제공동체와 상생 협력의 마지막 허파였던 개성공단도 먼저 폐쇄해 버리고 한반도를 준(準)전시상태, 일축즉발의 전쟁 위험지대로 몰아 넣었다.

약자인 북한이 살기 위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개발한 핵을 체제 보장(남북 수교와 북미 수교)은 해주지 않으면서 핵만 억지로 뺏으려고 해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미동맹의 핵우산을 못 믿겠다면, 차라리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유일의 아프고 부끄러운 75년 민족분단이 갈등과 혼란, 대결과 고통 속에서 앞으로 75년을 갈지도 모른다.

社說

만연한 체육계 폭력 뿌리뽑아야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폭력에 시달려온 20대 국가대표 선수가 세상을 등졌다. 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는 자신이 소속된 경주시청 팀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최근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 선수가 생전에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체육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어느 곳도 최 선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선수가 남긴 녹취록과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 선수는 감독과 선배 등으로부터 육설 뿐 아니라 온갖 폭행과 폭언, 협박, 성희롱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가해자들은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데 음료수를 주문했다는 이유로 20만원 어치의 빵을 사 오게 해 강제로 먹였고, 감독에게 알리지 않고 복숭아 1개를 먹었다고 구타했다고 한다. 체중 조절을 못 했다고 사흘을 굶기는가 하면 슬리퍼로 뺨을 때리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폭행 당시의 참혹한 장면이 생생히 담겨있다. 심지어 임시로 고용한 물리치료

사 팀닥터와 선배는 최 선수에게 금전을 요구해 이들 계좌에 거액의 돈이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계의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1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코치들로부터 폭력과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서둘러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대한체육회는 대대적인 반성과 혁신을 다짐하며 스포츠인권센터도 만들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관건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할 것과 체육계 차원에서 쇄신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1년 6개월 만에 이러한 사건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피해 선수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선수들에 대한 빈번한 폭력 행사는 우리 체육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번 일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강압적인 훈련방식을 당연시하는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도 손을 봐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062) 971-7400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기승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소액 현금화' 관련 불법 광고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와 관련된 대책이 시급하다. 금감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5만 5,274건의 접수건 중 적발대상으로 선정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18년, 1만1,900건) 대비 37.4% 증가한 것으로 불법광고 자체의 증가율 보다 시민감시

단의 제보 적발활동의 활성화에 기인했다고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휴대폰)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 대출이 가능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양벌주의가 적용되는 통장 매매 및 작업 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전

년대비 각각 65.5%, -26.4%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접근성이 쉬운 만큼 불법광고업체도 친근한 마케팅으로 금융 이해도가 낮고 독자적 수입이 없거나 적은 청소년이나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차원의 금융교육이 시급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군본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